여러분 곁에 늘 가까이 있는 은행
동양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광주 5/12℃ 목포 5/11℃ 여수 6/10℃

단기 4343년 (음력 12월 25일)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2-8111 kwangju.co.kr 제18595호 1판 2010년 2월 8일 월요일

우암학원 창학 60주년
제2의 창학원년, 출발 2010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

금호 구조조정 위기국면

채권단 "사재출연 약속 안지켜 경영권 보장 못해"

오늘 워크아웃 지속 여부 재검토

금호아시아나그룹의 구조조정이 중대 고비를 맞았다.

7일 산업은행 등 채권단에 따르면 금호그룹 대주주(오너) 일가가 보유 계열사 주식 의결권과 처분 위임권을 양도하지 않은 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대치해 금호그룹 구조조정이 올 스톱 됐다. 〈관련기사 8면〉

채권단은 오너 일가에게 데드라인인 이날까지 사재 출연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룹 경영권을 보장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지만 오너들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채권단은 이에 따라 금호그룹의 구조조정 계획을 변경해 경영권 보장 철회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은 지난 6일 출입기자 초청 산행에서 "금호 측에 이번주까지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라고 통보했으나 일부 오너 일가가 데드라인을 어겼다"며 "워크아웃과 자율협약, 신규자금 지원 합의, 이행각서(MOU)상 경영권 보장 등을 모두 철회하고 8일 채권단회의를 열어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를 진행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민 회장은 또 "박삼구 명예회장은 보유주식을 넘기는 것에 동의했지만, 오너 일가에서 의견이 조율되지 않고 있다"고 말해 박찬구 전 회장이 보유주식 양도에 반대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금호그룹 오너 일가의 책임 이행이 늦어지면서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과 금호석유화학의 자율협약도 발동하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자칫 금호그룹 구조조정 계획이 전면 재수술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의 워크아웃 절차가 지연되다 보면 법정관리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또 금호산업과 금호타이어에 대한 긴급 운영자금 지원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설을 앞둔 협력업체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것으로 관측된다. 금호산업의 주채권은행인 우리은행은 금호산업에 2천800억원의 신규 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이 회사가 보유 중인 대우건설 주식을 담보로 설정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지만, 금호 오너 일가가 대주주 책임을 이행하지 않으면 자금 집행은 어렵다고 못 박았다.

금호타이어에 대한 1천억원의 신규 자금 지원 여부는 오는 9일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결정될 예정이지만 오너 일가의 사재 출연 지연과 노조의 동의서 제출 거부로 실제 지원 여부는 불투명하다.

안양수 산업은행 금호 경영지원단장은 "박 회장 일가의 사재 출연 약속의 이행기간은 주말까지로 이미 지났다"면서 "채권단의 분위기가 좋지 않아 8일 회의에서 어떤 결론이 나올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금호그룹의 운명이 달린 문제이니만큼 채권단과 오너들이 대타협을 이룰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채권단과 금호 오너들 모두 언론 플레이를 통해 서로를 압박하는 면이 없지 않다"며 "워크아웃이 무산되면 양측 모두 손실이 크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에 채권단 회의 전에 막판 대타협을 이루지 않겠느냐"고 전망했다.

/박정욱기자 jwpark@·연합뉴스

떡메치는 외국인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1주일 앞둔 7일 광주시 광산구 송정동 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설맞이 외국인근로자 장기자랑'에서 외국인들이 떡메치기를 하고 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민주 광주·전남 국회의원들 공천 방식 등 반발

지도부와 정면충돌 움직임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이 민주당 운영과 지방선거 연대, 시민공천배심원제 도입 등과 관련, 지도부와의 정면충돌도 불사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6월 지방선거와 7월 전당대회를 앞두고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광주시당 위원장인 김동철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국회의원과 민주당 중도성향 국회의원들에게 서신을 통해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통합과 연대는 무책임한 정치공학적 발상"이라고 민주당 지도부에 직격탄을 날렸다.

김 의원은 "수도권에서 추진하고 있는 선거 연대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호남지역의 일부를 양보하겠다는 방안은 무책임한 발상이며 호남민과 당원을 모독하고 우롱하는 정치적 흥정 행위"라고 지적한 뒤 "지도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인재영입과 통합의 노력도 없이 허송세월을 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7일 광주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도 "그동안 당내 중도성향 시니어 그룹과 초재선 의원들이 꾸준히 회동을 가져오며 당내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데 의견을 함께 했으며 조만간 30여명 이상의 현역 의원들이 세력화에 나설 것"이라며 "광주·전남 국회의원들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 대다수 동참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광주 초재선 국회의원들과 전남지역 재선 이상 국회의원들은 김동철 광주시당 위원장의 입장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파문은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전남지역 모 재선의원은 "그동안 소수 야당으로서 단결이 우선이라는 점에서 말을 아껴 왔으나 당 운영이 소수에 의해 독점당하는 것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밝혔으며, 광주지역 모 초선의원도 "김동철 의원의 주장에 찬성하며 이제 광주·전남 국회의원들의 목소리를 결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광주 국회의원들은 민주당 지도부가 추진하고 있는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광주시장 후보 경선 도입과 관련, 내주 최종 입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시민공천배심원제의 경우 광주 국회의원 가운데 강기정, 이용섭 의원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부정적인 입장이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광주 민주당 구의원 싹쓸이 나섰나

끝내 '4인 선거구제' 분할…군소정당 반발

광주 기초의원 선거에 '4인 선거구제' 도입을 제안한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안이 민주당 출신 광주시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시 의회 행자위는 지난 6일 시 선거구획정 위원회가 제출한 '광주시 자치구 의회 의원정수 등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의안 심사를 갖고 기초의원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제' 위주로 수정해 가결했다. 수정안은 시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4인 선거구제' 6곳을 '2인 선거구제' 12곳으로 분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기초의원 선거구는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제안한 19개 선거구에서 25개 선거구로 늘어나게 되며, 의원정수는 59명 그대로다.

이로 인해 지난 2006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노동당과 무소속 후보들의 기초의회 진출을 가능하게 하며 민주당 독점의 자치구 의회에 건전한 토론문화가 가능하게 했던 4인 선거구제가 불과 4년 만에 2인 선거구제로 분할되게 됐다.

이날 수정을 주도한 민주당 출신 시의원들은 "4인 선거구제는 풀뿌리 정치의 기본 방향인 지역별 책임정치가 되지 않는다"며 수정 배경을 설명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와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군소정당들은 "민주당이 2인 선거구를 통해 지방정치 독점체제를 유지하려는 음모를 드러냈다"고 반발했다.

한편,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이날 4인 선거구 분할에는 의견을 같이 했으나, 뒤늦게 서구 갑과 을, 광산 기초의원 정수 조정을 둘러싸고 8시간 넘게 논쟁을 벌이다가 김성숙 위원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 이정남·손재홍·이명자 의원 등이 수정안을 의결해 적법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의회는 9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의결할 계획이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